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개최: 북러 군사·외교 밀착 배경과 대응전략

2023년 9월 14일 (목)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북러 군사·외교 밀착 배경 및 대책*

2023. 9. 14.(목), 이윤식 외교안보센터 실장

<요약>

-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13일(현지시간) 아무르주 소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에서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짐
 -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밀착해 온 북-러가 무기 거래 등 '민감
한 분야'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활용
 - ※ '민감한 분야'라 함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대량살상무기(WMD) 자금 지원 및
핵잠수함 기술 이전 등의 비공개 거래를 통칭
- 두 정상은 4시간의 비공개 회담 후, 기자회견은 물론 공동선언문 발표 등 회담 내용 관련 일체
의 설명이나 발표가 없어서, 북-러간 고강도 밀착에 대한 '전략적 함구'로 해석 가능
- 同 회담의 배경은 △북한의 대러 탄약 등 무기지원, △러시아의 대북 위성기술 제공, △MIG-29
와 수호이(SU) 계열 전투기 수출지원, △식량 지원 및 北 노동자 파견, △에너지 지원 및 철도협
력 등의 리스크를 상호 주고받는 군사·외교적 거래
- 한편, 이런 차원을 넘어, 한미의 대북제재 무력화를 위한 북러간 이번 공조는 한반도 및 주변 정
세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농후
 - 이에 강력한 대북·대러 경고와 함께, 북·중·러 동맹 와해를 위한 중국 활용 및 새로운 한미의
압박 공조 강화 등 전략적 수단 강구가 필수

1. 북-러 정상회담 개최 배경과 특징

①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러 이해관계의 일치

- 집권 12년 간 핵·미사일 도발 행보에 치중해온 김정은으로선 강화된 대북제재 속 출
구가 필요하고, 주민의 체제이반을 달래기 위한 식량·달러·에너지 등 3난(難)의 탈피
를 위해 외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
- 한편,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틴은 '포

* 同 보고서는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통일 분과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작성한 내용임

탄 확보' 등 직접적 지원확보 외에 우호 국가가 전무한 '현상 타개'를 위해서도, 더
더욱 북한의 지지와 성원이 긴급요

- 상기 안보환경 속, 코로나19 완화로 북한이 중·러와의 국경 출입 및 인적 왕래를 재
개함으로써, 2020.1월 비상방역 조치 이후 중단되었던 김정은의 해외방문도 가능

② 군사협력 차원의 탐색전을 거친 후 전격 정상회담 개최

- 7월26일 푸틴은 평양에서 열린 '축하 행사'(7.27 '전승절')를 계기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을 파견. 즉, 우크라이나戰 와중에 국방장관의
방북은 무기조달 논의 등 매우 긴급한 현안이 존재했음을 시사
- 당시 김정은은 직접 쇼이구 일행을 무기 전시장으로 안내하고, 미군 정찰기를 카피
한 자체 생산 무기와 ICBM, 핵어뢰, 극초음속미사일, 신형 전차 등도 소개
- 한편, 이번에 北 매체 영상을 통해 파악된 공식 수행원은 14명. 그 가운데 군부 실
세인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상 원수)과 강순남
국방상 등 7명이 정복 차림의 현역 군 고위장성으로 구성된 걸로 볼 때, 이번 회담
은 사실상 '군사 정상회담'임을 드러냄

③ 상징성 있는 회담 장소 선정 및 노골적 '담론' 제시

- 북-러 정상은 회담 개최지로 유력하게 거론된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 내 동방경
제포럼(EEF) 장이 아닌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회담장으로 최종 낙점
※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임대해 사용 중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2년에 건설한 곳으로 최신 첨단 우주기지로 역할
- 한편, 회담 의제와 관련, 푸틴은 북한에 대한 위성기술 제공여부에 대해 "우리는 이
때문에 이곳(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왔다"고 밝혔고, 김정은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
서 "푸틴과 러시아 지도부의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

④ 푸틴의 이례적인 김정은 환대, 갑을관계의 역전(?)

- 이번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지각대장'으로 알려진 이미지와 달리, 김정은보다 30분
먼저 회담장에 도착해 기다리며 40초간 악수를 하는 등 극진한 환대로 밀착을 과시
- 또 김정은이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아버지인 김정일 등 선대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김정은에 대한 우호적 입장과 회담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노력
- 아울러 만찬장에서 건배사로 김정은을 '진정한 친구'로 표현하는 등 최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모습을 보임(*한편, 김정은은 푸틴의 건강을 기원)

⑤ 미국 및 서방 언론의 북러 밀착 견제

- 9.4(월) NYT, 美 당국자를 인용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을 검토 중이며, 장갑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 보도
- 이는 북-러 양측 보다 한발 빠른 보도. 일각, 푸틴의 김정은에 대한 친서 전달에 이어 북러 정상외교일정을 언론에 노출함으로써 "양국간 밀착 행보를 견제하고 대응 움직임을 관측하려는 것"으로 분석
- 9.5(화)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

☞ 즉, "미국 측의 언론 노출을 통한 '김빠기 전략'과 일정 및 동선 사전 노출 때문인 듯, 북-러는 실제 정상회담 장소를 변경한 것이란 후문"

2. 북러 간 협력 가능성과 한계

□ 가능성 측면

① 포탄 및 야포,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의 공급

- 현재 전선에서 포탄과 야포, 다연장로켓(MLRS) 등이 절실한 러시아는 북한을 '후방 병참기지화' 함으로써 전세를 만회하고 전쟁 종결을 위한 우위를 점하려 함
 - ※ 일각, 현재 北의 비축 탄약은 최소 100만톤 정도. 미국산 전차를 뚫어야 하는 러시아는 포탄과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가 절실
- 한편, 김정은은 러시아 방문에 앞서 3차례에 걸쳐 군수생산 라인을 직접 돌아보며 포탄과 미사일, 신형전차 등의 생산을 정상화 할 것을 촉구. 이를 통해 외화획득 및 북한이 필요한 식량 등의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② 정찰위성 조기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 푸틴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라며, "이것이 우주기지서 (김정은과) 회담하는 이유"라고 언급하며 위성부문 협력을 노골화함
- 군사정찰 위성 개발을 공언해 온 북한은 5월에 이어 지난 8월에도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잇달아 실패. 러시아가 대북 인공위성 개발 지원에 나설 경우 북한은 정찰 위성 보유를 위한 허들을 넘게 될 전망
- 한편, 북한이 정찰위성을 배치하면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국군의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북한의 기습 핵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

③ 전술핵잠수함 완성 등 해군 무장력 강화

- 9.6(수) 김정은 참관 하에 진수식을 가진 북한은 첫 전술핵잠수함 완성과 핵추진 잠수함 보유, 스텔스함 건조 등 해군력 현대화 관련 러시아의 기술전수 등으로 이번에 일정한 성과를 과시
- 특히, 김정은은 방러 직전까지 해군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데다, 정상회담 직후 블라디보스토크 주둔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와 하바로프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래의 잠수함 건조기지 등을 참관
- 이와 관련해서, 합참은 “北이 진수한 전술핵잠의 성능이 과장됐다. 김정은의 재촉으로 조기 진수하긴 했으나, 정상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다”란 대북정보를 확보
-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러시아의 핵잠 기술지원이 이뤄진다면, 北 해군의 무장력 강화는 물론 美 핵우산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

④ 북중러 합동군사훈련 실시

- 북러가 일회성 무기거래 차원을 넘어 지속적 군사안보 분야 협력으로 양국 관계를 확장시켜 나갈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함
- 특히, 쇼이구 국방장관이 9월 4일 북한과 연합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
- 국정원도 9월 4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쇼이구 장관이 지난 7월 방북 때 김정은에게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음.

□ 한계 측면

① 민감한 첨단 군사기술의 제공은 제약

- 푸틴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및 위성 관련 최신 기술을 전면 제공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무엇보다, 러시아가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인프라가 없는 북한에서 이를 완벽 소화하기 어렵단 평가. 일각, “간난 아기에게 스테이크를 주는 것과 같은 격”
- 정상회담 장소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잡는 등 북러 우주기술 협력을 공언했지만, 제한된 기술만을 제공할 것이란 점에서 두 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기술 제공(로켓 및 광학장비 등)만 이뤄질 가능성

② 북한의 러시아 군사기술 해킹 논란

-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굳어지던 9월 7일 마이크로소프트 위협분석센터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 전쟁을 지원하면서도,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 러시아 정부와 방산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폭로한 점에 주목할 필요

- 구체적으로 지난 3월 북한 해커단체들의 러시아 항공우주연구소 해킹 사례를 적시
- 바이든 정부가 북러 밀착을 견제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경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되나, 이 같은 정보에 러시아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푸틴의 대북 군사기술 및 최신형 무기 제공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 존재

③ 중국 존재감은 줄어든 북러만의 反서방연대

- 김정은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국 등 서방을 “러시아에 반대하는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맞서는 “성스러운 투쟁(반제자주 투쟁)”을 강조. 즉,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사태를 성전(聖戰)이라 주장한 것
- 그러나 당초 북러 간 밀착은 한미일 공조에 맞서는 차원의 북중러 동맹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국의 존재감이 미미한 김정은-푸틴 간 의기투합 수준에 머무는 한계를 노정
- 중국이 북러 밀착을 견제하거나 시진핑 등이 김정은에 대해 ‘군기잡기식’ 조치를 취할 것이란 관측은 과도하다 하더라도, 대북 유류 공급량이나 식량지원 물량 조절 또는 중단을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가능성 불배제

☞ 中 외교부는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으며, 의례적인 논평도 내지 않고 있어 복잡한 심사와 계산 속에 있음을 시사(일각, “국제 왕따와 한 배를 타는 것에 대한 경계심 표출”로 평가)

3. 향후 대응전략

① 북러 무기거래의 부당성 여론 확산과 비판 분위기 조성

- 김정은의 푸틴 찬양 발언과 우크라 침공에 대한 맹목적 두둔과 지지입장 공개표명에 대해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의 비판 여론 확산이 필요
 - ※ 김정은은 정상회담에서 러의 우크라 침공을 “신성한 투쟁”으로 미화분식하고, “우리는 항상 푸틴 대통령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다”고 언동
-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던 7월 15일 우크라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하고 부차시(市)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 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 시에서 러시아의 만행을 비판한 사실을 적시해, 북러 정상의 비정상적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② 中의 ‘김정은 다루기’ 국면, 활용 전략

- 김정은의 대러 밀착과 관련해 중국 영도그룹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우리

- 의 대북정책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마련이 필요
- 특히, 중국 측이 대북 경고성 차원에서 카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안인 중국 내 억류 탈북민 2,600여명의 한국행을 단행할 수 있도록 대중 물밑접촉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한편, 9.23(토) 개막하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 최고위급을 파견해, 경색된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

③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및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 정부 차원에서 직접 거론하기 민감한 사안을 당이나 개별 의원 차원에서 한발 먼저 치고 나간다면, 의외의 성과와 함께 '북러 밀착'을 희석시킬 수도 있음
- 특히, 북러 밀착의 반대 급부로 우리의 대북 레버리지인 '확성기 방송 재개'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을 개별 의원이 먼저 제기하고, 이를 당 지도부가 받아 여론을 결집한다면,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결정 폭이 다소 여유로울 수 있음

④ 북중러 합동 군사훈련의 문제점 강력 지적

- 북중러 합동 군사훈련이 성사된다면 이는 한미일 대북공조에 대응하는 북중러 연대가 군사협력으로까지 확장된다는 의미
-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이란 식으로 감싸온 중러가 북한을 지렛대 삼아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고 가려는 전략 틀을 짠다는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은 물론 미일에게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극적 대응이 요망

⑤ 대북제재 강화와 사이버해킹 대책 마련

- 한미는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본격화하는 데 대해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북한의 사이버 국제범죄나 해킹을 통한 금융전산망 탈취 등 돈줄을 죄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 이는 한미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주목되는 부분